

유기동물의 습격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견 내다버린 인간에게 '공포의 부메랑'으로

바림받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야생화되면서 농가나 주택 등 거주 공간을 습격하는 일이 늘고 있다.

겨울철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수준을 넘어 자신보다 덩치가 큰 가족을 공격해 죽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을 방지할 경우 사냥 본능이 생겨 인간까지 직접 공격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일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동물 포획으로 출동한 건수는 968건으로, 지난해 829건에서 16.7%나 늘어났다.

특히 전남소방본부의 들개 포획 출동 현황은 2016년 1693건, 2017년 2911건, 올해 1~11월 268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들개출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순천 788건, 담양 764건, 해남 706건 순이었다.

실제 지난 29일 오후 3시께 보성군 득량면의 한 축사에서 들개 3마리가 가족을 물어 죽였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송아지 1마리와 청둥오리 13마리가 들개의 공격으로 죽어 있었다.

119대원들은 현장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핏볼테리어 잡종 1마리를 마취총으로 포획했지만 나머지 2마리는 아산으로 달아나 추적하고 있다.

경적이 되면 30kg대의 몸무게가 되는 핏볼테리어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고



보성서 들개 3마리 축사 공격 담양·장흥 등서 피해 잇따라 광주에선 떠돌이 개 공포까지 길고양이 피해 신고도 줄이어 사람까지 위협...대책마련 시급

인내심이 강한 순종적인 개이지만,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성향과 강인한 근육질 몸매 덕분에 투견(싸움견)으로도 이용되는 종이다. 이 때문에 주인의 보살핌 없는 야생 생활시엔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담양에서도 울 들어 B씨가 키우던 염소 6마리가 들개의 습격을 받았고, 장흥에선 송아지 2마리·염소 10여 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기도 했다.

도심 한복판에서도 주인 없는 들개의 위협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광주시 북구 전남대에서 여학생이 떠돌이 개 두 마리에 쫓겨 간신히 건물 안으로

몸을 숨겨 불상사를 피한 일도 있었다.

인간에게 바림받은 동물 중 개 뿐 아니라 고양이에 의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4일 광주시 동구의 한 주민은 길고양이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구청에 제기했다. 고양이가 들이여역 다똥을 하면서 낸 울음소리에 의한 소음 피해 뿐 아니라 먹이를 찾아 쓰레기 봉투를 찢어내 위생상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다. 또 지난 3개월간 죽은 채 방치된 고양이 4마리에 대한 처리를 구청에 주문했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광주 북구 망월동 인근 마을에선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먹이를 찾아 내려온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 등을 뜯고, 집 주방까지 침입하는 바람에 주부들이 놀라는 경우가 다반사인 실정이다.

광주시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올해 11개월 간 광주에서 유기된 개는 1624마리, 고양이는 1417마리에 이른다.

이범기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은 "늑대를 조상으로 하는 개의 경우 본능에 따라 5~6마리 이상 떼지어 다니며 자신보다 약한 개체를 공격하려는 습성을 보인다. 따라서 노인이나 어린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개들은 영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포획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소방서나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재판관할이전을 신청하는 등 꼼수에 꼼수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9일 전씨가 낸 광주지방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어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피난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회상위원회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10월 2일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같은 달 8일 광주지법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장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관할이전 신청은 항고기 불가능한 데도,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 등을 들어 즉시 항고에 나선 것을 두고 재판을 연기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법원도 검토 끝에 전 전 대통령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광주지법의 판단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진태 5·18기림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꼼수에 꼼수를 더해 재판을 연기해온 전두환씨가 이번엔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급해진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광주시민들 앞에서 법의 심판대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통신중계기 하마터면... 2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인근 갯길에서 주인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KT 통신중계기로 번질 뻔 했다. 이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독자 김인성씨 제공>

'상습 추행' 전 합평군수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30일 안병호 전 합평군수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안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모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직원과 지역 여성 5명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군수의 성범죄 의혹은 지난 3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병관 기자 dss6116@

'구구단 학대' 아버지 징역형

○구구단을 못 외운다며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는 등 자녀들을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

○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전기철)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A(43)씨는 지난해 여름 집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청소기로 딸 B(12)양의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에는 김치냉장고에 열음을 넣어 놔다며 자고 있던 B양을 깨워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막대기 등으로 폭행했다는 것.

○A씨는 구구단을 잘못 외운다며 아들 C(9)군을 폭행하고, 잠을 자던 중 이불에 토를 하자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동생이 토를 한 이불땀래를 하라며 잠자고 있던 C양을 깨워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박진표 기자 lucky@

2명 숨진 여수 돌산 무인텔 화재 수사 착수

지난 1일 여수 돌산읍의 한 무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화재가 발생한 무인텔에서 현장 조사와 함께 화재로 숨진 A(30)씨와 B(여·31)씨 등 납녀 투숙객 2명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이는 한편, A씨 등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이 2층 객실에서만 난 점에 주목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방화로 불이 났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 당시 무인텔의 전기가 끊기면서 전자식 출입문이 모두 잠기는 바람에 자칫 대형참사가 발생할 뻔 했던 것으로 알

려졌다.

탈출구를 잃은 투숙객들은 창문 앞에 몰려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곧바로 2층(높이 3m) 창가 아래에 소방차를 대는 방식으로 투숙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소방대원들은 투숙객이 창을 넘어 소방차 지붕 위로 이동하는 방법을 동원, 10여분만에 가족 단위 투숙객 등 9명을 구조했다.

한편 화재는 지난 1일 밤 10시 58분께 무인텔 2층 객실에서 발생했으며 30여분 만에 꺼졌다. 객실 내부에서는 투숙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투숙객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투숙객 9명이 구조됐다. 불이 난 무인텔은 4층 규모로 객실 30개가운데 24개에 손님들이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데이트폭력 경찰 공무원 법원 "정직처분 적법"

법원이 연인이자 같은 직장 동료인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경찰 공무원 A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광주경찰청장은 A씨가 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처를 입혔다며 파면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정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정심사위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했다. 이에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민국 무역 세계로 함께, 미래로 함께

제55회 무역의 날 포상 광주·전남 전수식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광주·전남 전수식 행사

[광주광역시 전수식]

일시 / 장소 2018. 12. 10(월) 11:30~13:00 / 라마다호텔 4층 대연회장

참석자 광주광역시장, 유관기관장, 수상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등

포상 개요

- 수출의 탑 수상업체 : 총 27개사(2017년 21개사)
 - 7천만불탑(1), 3천만불탑(3), 2천만불탑(1), 1천만불탑(4), 5백만불탑(8), 3백만불탑(1), 1백만불탑(9)
- 수출유공자 포상 수상자 : 총 31명(2017년 15명)
 - 동탑산업훈장(1), 산업포장(2),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3), 산업부장관표창(20), 한국무역협회장표창(3)

[전라남도 전수식]

일시 / 장소 2018. 12. 12(수) 11:00~12:30 / 목포 현대호텔 1층 컨벤션홀

참석자 전라남도지사, 유관기관장, 수상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등

포상 개요

- 수출의 탑 수상업체 : 총 32개사(2017년 20개사)
 - 10억불탑(1), 9억불탑(1), 1억불탑(2), 5천만불탑(1), 3천만불탑(3), 2천만불탑(1), 1천만불탑(2), 5백만불탑(8), 3백만불탑(7), 1백만불탑(6)
- 수출유공자 포상 수상자 : 총 21명(2017년 12명)
 - 금탑산업훈장(1), 동탑산업훈장(1), 철탑산업훈장(1), 석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4), 국무총리표창(3), 산업부장관표창(7), 한국무역협회장표창(2)

관련문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43-9400